

저작권 보호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 정 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clee@snu.ac.kr

언어학과 명예교수, UCLA와 미국언어학회(LSA) 객원교수로 강의. 경기고, 서울대영어영문학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대 언어학 박사. 한국인지과학회장, 서울대인지과학연구소장, 서울대 인지과학 협동과정 주임 역임.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현 Editor-in-Chief, Linguistics and Philosophy (Kluwer) 등 여러 국제지 Editorial Board 역임 (80년대초중반부터 국내 및 국제 인지과학 운동 주도)

1. 들어가기 - 왜 저작권?

논문과 저서를 내는 연구자들에게 표절과 자료 위조/변조를 금하는 연구윤리의 의무가 무겁게 지워지고 요즘 크게 강조되고 있으나, 정작 그와 표리관계에 있는 저작자들의 권리인 저작권은 인식이 잘 돼 있지 않아 우리 사회에서 그 보호 수준이 극히 낮다고 하겠다. 이는 논문과 저서를 내는 저작자들 스스로가 권리 위에 잠자는 상태로 관심이 없고, 저작권 제도와 환경이 미흡하고, 또 저작권의 이용자들인 출판사,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 방송사 등의 준법정신이 박약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권리로서, 저작권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57년에 제정되고 86년에 많이 바뀐 우리 저작권법의 1조는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의 보호는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저작권에는?

저작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어 이들 권리를 이용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하고 그 대가(저작권료)를 받는다. 이런 저작재산권 외에 저자는 저작 인격권으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어 공표할 권리, 저작물에 반드시 자기 이름이 들

어가야 하는 권리, 저작물의 변형 금지 권리의 인격적 이익이 있다. 저작인격권은 표절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어찌 보면 표절당하지 않을 권리이기도 하다. 여기서 출판사에게 이용허락하는 복제권 등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권법상 3년이나 저작자들이 대부분 이를 모르고 10년으로 계약해 주고, 침해를 받아 못 마땅해도 옮기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계약기간을 되도록 3년으로 해놓고 그간에 좋으면 연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지하고 옮겨도 좋다. 해외의 좋은 책을 번역하는 경우, 번역자도 저작자로서 2차저작권을 누리게 되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진 원저작자의 허락(대개 출판사가 대행)을 받아야 한다. 저작물의 저작권 시효는 현재 저작자 사후 50년이나, 한미 FTA가 체결되면 사후 70년으로 연장된다(그래도 이미 50개국 이상이 사후 70년이다).

3. Open access냐 저작의 질 지키기냐?

1700년대에 서양에서 저작권이 법적으로 보호되기 시작한 후에도 간혹 저작물에의 자유로운 접근 측면만 내세우는 소위 copyright에 반해 copyleft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 왔고, 점차 디지털 온라인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부분적으로 또는 저개발국 중심으로 시도되는 소위 저널 논문에서의 open access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놀랍게도 정부 학술지원기관인 학진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대세를 크게 파악하지 못하는 편협한 생각에서 오는 오도된 움직임일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은 연구비를 받고 수행하는 연구의 결과물인 논문

에 대해 왜 출판사 및 OSP가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학회, 저작자 및 저작권 보호 단체가 개입하느냐 하는 것인 듯하지만, 저작자 입장에서 보면 연구비는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쓰일 뿐 결과 저작물이 예상외의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가 발생할 때 이 인센티브를 거부당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재 해외 저널에 실리는 자기 논문도 자기 대학 도서관이 구독해주지 않는 경우 편당 30내지 70여 불이나 지불해야 내리받을 수 있다든가 선진국 e-journal들의 구독료가 엄청나 우리 대학도서관들이 개별적으로 구독하기 힘들고 Thomson Scientific의 SCIDB가 고비용이어서 학진이 구매하기가 벅차다든가 하는 문제는 우리 학문을 어떻게 선진화하면서 동시에 정보 유통과 출판 행태를 국제화 내지 선진화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가면서, open access는 우리도 온라인 환경상에서 국부적으로 그것도 정부 유관기관이 아닌 학문 연구 주체들의 자발적인 유연성 있는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운동이 오도된 상태로 확대되면 우리끼리 서로 인용해 좋고,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고, --- 마치 IT 강국의 이미지를 악플 자유천지로 만들고 자살자를 양산케 한 것과 유사한 자유 천지 같겠지만, 그 결과는 자칫 질이 보장 안 되는 저작물들의 집합소와 유통 경로 노릇만 하다가 문히게 될 공산이 크다. 필자 자신도 open access의 Scientific Journals International (SJI) <http://www.scientificjournals.org>에 세계 “명문대” 교수들과 더불어 무슨 편집진에 초대되어 투고 논문의 심사를 수년째 여러 차례 해보았으나, 주로 중동, 아프리카 등지의 연구자들의 논문이 많이 들어오고 좋은 논문을 대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음을 경험하고 있다. 즉 이런 자유세계에는 경쟁력이 부족한 다수가 몰려든다. 그러나 peer review를 하는 것은 사실이어서 안한다고 비방한 측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는지는 모를 일이다. 다수가 모여드는 학술지/단체에는 지원기관이 붙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우리 이공계의 저널들도 SCI, SCI-e가 됐다고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판로 개척에 손을 들어버리고 Elsevier, Springer에 내 맡기면서 순진하게 계약할 것이 아니라 영악하게 해서 우리 권리 부분을 정당하게 찾도록 해야 우리 학회와 필자들의 저작권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필자가 국내 국제지 Journal of Cognitive Science(<http://cogsci.snu.ac.kr/jcs>)를 편집하면서(ISI journal selection review 중) 판로 개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Ingenta 같은 전문 e-journal 배포회사가 저널 가격을 보고 도서관에의 장거리 전화 값도 안 된다고 상대를 안 한다. 싼 것도 죄다. 이러한 국제간의 계약 일도 저작권 보호 기관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 협회(저협)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한국 학술단체연합회와 그 산하 학회들이 우선 저협에 가입해 같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학문 선진국들과의 경쟁에 처절하게 나설 것인지 아니면 경쟁을 포기하고 IT 기술을 이용해 쉽고 자유로운 쪽으로 뭉치게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4. 온라인 업체들과의 관계는?

국내 발행의 학술지를 학회에서 논문 파일 그대로 받아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DB를 구축하고 도서관과 개인을 상대로 영업해온 지 10여년이 되어 감에도 아직도 이들 업체가 저작권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해 학회에 저작권 양도를 해주면 끝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학회는 출판사 처럼 특정 논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저자를 대신해 출판권을 빌려 행사하는 것이고, 저자가 갖는 광범한 권리(온라인전송권, 방송권, 재수록권, 등등)에 대해 신탁 받을 수 없다. 최근 76문고가 저자들에게 저작물 목록을 위탁해주면 온라인저자료를 후하게 내주겠다고 광고한 것은 OSP를 등에 업고 벌이려는 불법적인 영업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저협처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를 문광부에서 받아야 저작권 법상의 집중관리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우선 온라인저작권을 학술정보나 누리미디어 등의 서비스업체들한테서 제대로 지켜 학회를 지금처럼 무방비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개인 것도 학회와 절충해 받게 해 줄 수가 있도록(판매가의 10% 이상) 현재 저협이 노력하고 있다. 즉 저협이 단체회원인 학회나 개인회원을 대신해 온라인서비스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되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하고, 그것이 지켜지도록 감시하게 된다. 저협은 그 밖에 회원들에게 복사권료를 해마다 분배해주고 있다(전국의 복사점에서 받아 주로 학술회원에게). 학회 임원들도 저협 회원들은 이를 받고 있고, 학회와 학회회원들의 저작권은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라 학



회도 저협 단체회원으로, 학회회원도 저협의 개인회원으로 저작권을 보호받도록 되어 있다. 학회가 회원에게서 제출논문에 대해 위임받는 저작권조차 지켜주는 입장이다. 저협에 유명 시인 작가들도(김동리, 황순원, 조정래, 서정주 등) 대개 다 들어 있고, 학자들도 이혜구, 김태길, 백낙청, 조동성, 이기춘 교수 등과 한민구, 박성현, 이진우 교수 등 여러 학자들이 들어 있다. 필자도 최근 공저 논문을 모학회지에 실으면서 제출논문의 저작권 일체에 대해 위임한다는 조건의 서류를 내긴 했지만, 일부 학회를 제외하고는 많은 학회가 인력과 시간이 없어 그 논문의 온라인 저작권을 챙겨갔거나 챙겨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지식도 없어 이용업자들이 하자는 대로 필자들에게서 양도까지 받아 넘겨주고 실제로는 속는 일이 많다. 온라인업자들이 도서관과 개인한테서 논문 다운로드에 대해 막대한 돈을 받으면서 그 이용도수, 규모를 정직하게 밝히는 회사가 없다. 학회는 무지하고 무관심해서 방치하고 있고, 계약대로라도 저협이 챙겨주려고 해도 매년 바뀌는 회장 체제하에 계약 내용/계약서도 찾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 저자들이 뭉쳐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저작권은 죽고 만다. 그래도 뜻있는 학회들이 다행히 저협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해주고 있고, 개인회원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개인이나 학회 단독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항하기에는 시간, 비용과 감정상의 손해가 너무 심하다.

5. 이공계의 경우는?

위에서 학술지들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국제저작권의 문제가 주로 이공계 학술지에 해당되는 문제다. 개인적으로 저자나 편집자로 해외 출판사와 계약할 때도 자세히 계약조건을 보면 종이 출판에 따른 저작권료 외에 e-book을 낼 때 어떤 율로 추가 지불할지에 대한 조건이 덧붙여 온다. 해외에 논문을 내는 경우가 많은 이공계 필자들에게 그 해외 논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챙겨드릴 게 많지 않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국내 발행 국내지/국제지에 관여하는 분들은 해당학회/연구소가 저협에 가입해 온라인저작권료를 제대로 챙겨 받도록 돼야 한다. 그리고 개인학회회원에게서 제출 논문의 저작권을 위임받더라도 온라인권을 포함시켜 위임받지 않았으면(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학회도 분야에 관계없이 게재

료 등을 2, 30만원씩 받으므로) 앞으로 개인 필자가 온라인 저작권료를 별도로 저협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복사권료는 모든 학술저작자인 저협회원에게 매년 분배되며, 이공계라도 국내지에 간혹이라도 발표하는 논문(국내에 좋은 글을 시간 내어 내놓는 것도 분야의 저변 확대와 영향력의 확대를 위해 도움이 되는 활동이 될 것이다)과 신문 컬럼, 과학잡지에 내는 글 등이다 저작권을 누리게 된다. 그 글이 언제 교과서에 옮겨 실려 영예가 되고 매년 수십만원씩 교과서보상금이라는 저작권료를 타게 될지 모른다. 교과서보상금도 저협이 국회에 가서 열변을 토해 법개정에 따라 8년전부터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슬프다고 할지 재미있다고 할지 교과서에 실리는 작자미상의 사진/미술작품에 대한 보상금이 매년 국고로 되 들어가 쌓인 돈이 그간 99억원이 되어 이 돈을 어떻게 저작자 공익을 위해 쓸 것인가 논의하는 관리위가 구성되었다. 이만큼 선진국과 달리 저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에 따르는 저작권 위에 잠자고 있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 협회는 학술, 문예의 어문 저작물 뿐 아니라 미술, 사진, 만화, 건축 설계, 영화 등의 영상 저작물 등 음악과 방송극을 제외한 모든 장르의 저작물의 보호활동을 하도록 허가받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모로 이공계와도 관련이 있다.

6. 맺는 말

중요한 것은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내가 무관심함으로써 개인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저작권 질서 붕괴로 나타난다. 미국이 한국과의 FTA에서 자동차 산업을 버리더라도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을 확보해(‘미키마우스’ 협정이라 비웃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것을 학계, 연구계에 쏟아 만년 지적 재산의 우위를 지켜나가겠다는 계산이 있다. 그래서 자동차 수입 부분 때문에 오바마는 개정하자고 고집하는 것이다. 우리도 미약하지만, 아직은 제조업에도 매달려야 하지만, 학문과 과학 기술을 최선을 다해 발전시켜 저작권과 원천기술의 특허권 강국이 돼야 선진국형 부자 나라가 된다. 그러한 노력과 더불어 학술출판의 국제화/세계화에도 눈 떠 인구도 크지 않은 네덜란드 같은 출판 왕국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